

‘강제중군위안부 문제, 외교현안으로서의 증검’이라는
정부입장에 대한 질의

수 신 : 김 영삼 대통령 귀하
참 조 : 한 승주 외무부장관
발 신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 효재, 윤 정옥, 김 희원)

1. 국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강제중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구성된 민간단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중군위안부 문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쟁범죄, 인권침해의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가까이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해 왔고, 3년전 부터 여성단체들과 몇몇 뜻있는 학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비록 뒤늦게 문제제기 되었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 유엔동 세계적 연대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 일본정부와 국민이 과거 그들이 지지른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상규명과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2. 우리는 한 정부의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일본정부의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외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의 발표는 정치외교적 수사의 나열로 교묘하게 치장되어 있을 뿐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중군위안부가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발표 이후 따를 수 있는 후속조치로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는 “일본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수용한다.” “우리정부의 입장을 상당수준 반영한 것”이라고 적극적인 긍정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보 진전된 일본정부의 조사를 평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함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문제의 담당 실무자인 유병우 아주국장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해야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자주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적 현안의 매듭 선언’은 훨씬 신중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서둘러 매듭짓는 것에 대해 크게 비판적입니다. 도대체 중군위안부 문제때문에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크게 손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우리 정부가 서둘러 매듭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과거 1965년 한일협정에서 모든 배상은 마무리되었다고 거의 완벽하게 일본에게 변죄부를 주다시피함으로써 큰 우를 범했는데, 이제 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런 우를 범하시려고 합니까? 이 발언에 대한 귀하의 공식적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이번 외무부의 실책에 대해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유 병우 아주국장은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 신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한 사람이 계속 이 일을 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중군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원칙적이고 합리적이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우선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았다면 진상규명이 인차적입니다.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과 교육이 불철저했던 일본으로서의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진실을 양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배상의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배상을 정부차원에서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대동령의 그 뜻이 한일협정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는 일본에 대한 법적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며, 국제법과 한일협정에 대한 재해석등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진상규명과 더불어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급하는 '군대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이 일본의 의도대로 한일협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과 정부로서 역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50년 동안 기구한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묻혀온 이 비참한 인권유린과 전쟁범죄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통해서 한일 간에 평화와 인권존중, 정의를 존중하는 인식이 크게 꽃피고, 한일관계가 진정한 이웃으로서 정립될 수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에 대한 회답을 8월 30일 이내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3년 8월 9 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 효 재

윤 정 욱

김 희 원

별첨 : 일본정부의 2차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